

2019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목 차

▪ 임원 명단	_____	3
▪ 사무국 명단	_____	5
▪ 2019년 사업 보고		
(1) 주요활동지표	_____	6
(2) 2019년의 변화	_____	9
(3) 사무국 운영	_____	11
(4) 상담 및 사건 지원	_____	12
(5) 정책	_____	28
(6) 국제연대	_____	35
(7) 교육	_____	38
(8) 시민 참여	_____	40
(9)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_____	42
▪ 2019년 결산	_____	49
▪ 2019년 감사 보고	_____	52

임원

▣ 고문

- **김지형**
 - 前 대법관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 **박경서**
 - 대한적십자사 회장
 - 초대 대한민국 UN 인권 대사
- **전수안**
 - 前 대법관
 - 서울대학교 이사장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사단법인 ‘선’ 고문

▣ 운영위원

- **김인숙** (운영위원장, 법률사무소 ‘민들레’ 변호사)
- **강석민**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1과장)
-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 **김종대** (現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
- **박인혜** ((사) 인천여성의전화 이사)
- **변영주** (영화감독)
-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 **안미자**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 **이경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 **정상덕** (원불교 백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
- **허남주** (前 서울신문 사업단장)

▣ 소 장

- 임태훈 (2009 ~ 현재)

▣ 감 사

- 정정훈 (‘지담법률회계세무사무소’ 대표 변호사)

▣ 정책위원

- 강화수 (前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 김철효 (시드니대학교 사회학 박사)
- 우종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사무관)
-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범수 (미래신경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

▣ 실행위원

- 이인섭 (서울NPO지원센터 변화지원실 매니저)

사무국

▣ 사무국

김형남

사무국장

▣ 기획정책팀

조규석

기획정책팀 간사

▣ 상담지원팀

방혜린

상담지원팀 팀장

윤선주

상담지원팀 간사

함성현

상담지원팀 간사

▣ 참여홍보팀

임상열

참여홍보팀 팀장

김지수

참여홍보팀 간사

이상면

참여홍보팀 간사 (비상근)

▣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2019년 사업 보고

1 주요 활동 지표

(1) 상담

- 상담 접수 : 1,669 건 (전년 대비 35% 상승)

상담 창구	건수
아미콜 상담전화	845
홈페이지 상담실	706
이메일	100
방문	4
카카오톡	8
서신	4
기타	2

(2) 후원

- 후원회원 : 1,254 명 (2019년 12월 31일 기준)

월	회원		후원금	
	회원 수 (명)	전월 대비 증가 (명)	월 총액 (원)	전월 대비 증가 (원)
1월	812	17	11,398,950	325,000
2월	830	18	11,663,950	265,000
3월	854	24	12,023,950	360,000
4월	878	28	12,453,950	430,000
5월	893	15	12,983,950	530,000
6월	921	28	13,481,950	498,000
7월	930	9	13,616,950	135,000
8월	948	18	13,903,950	287,000
9월	956	8	14,008,950	105,000
10월	1,093	137	16,251,250	2,242,300
11월	1,241	148	20,810,550	2,317,000
12월	1,254	13	21,015,550	205,000
계	1,254	463	21,015,550	7,699,300

(3) 언론

- 언론 노출 : 6,525 건

월	빈도
1월	430
2월	210
3월	321
4월	282
5월	429
6월	285
7월	306
8월	326
9월	234
10월	1,606
11월	1,707
12월	389

(참고: 본 통계에는 원칙적으로 뉴미디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언론사가 개설한 채널의 경우에는 반영하였습니다.)

※ 10, 11월 증가분은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4) 창립 10주년 행사: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군인권센터는 2009년 9월 출범한 이래 10여 년 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통해 이뤄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 세월 여러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주셨던 분들께 보답하고, 새로운 10년을 시민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객석에는 센터 임원 및 10년 지기 회원 두 분, 군인권 피해자 유가족(故 윤 일병 사건 유가족, 마린온 추락사고 유가족,故신 상병 사건 유가족)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진선미(前 여성가족부 장관), 도종환(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인순, 김종대님이 자리했습니다.故 이한열 열사 모친, UN CERD(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 정진성 위원 등 여러 외빈께서도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및 기관에서도 여러 축하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평화나눔회,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KNP+, 성소수자부모모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 NCKK 인권센터, OSF, 인권재단 사람, 공무원 및 경찰청 등 노조 및 대한항공 직원연대, KIDA,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젊은여군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내·외빈이 초청한 인사를 비롯하여 일부 회원께서는 공연 입장권을 기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본 센터도 각 군 및 의경, 의방 대원을 무료초청하였으며 의무경찰 대원(서울청 소속)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0
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 콘서트

군인권센터

10th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2019. 10. 8. (화)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영화감독 변영주 영화배우 권해효

가수 이은미 가수 김현성 가야금연주가 정민아

콘서트 수익금은 국군장병 인권 침해 피해자원을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 티켓구매문의 02-7337-119 (내선 4번)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한 후원 계좌 국민 009937-04-013027 군인권센터

▪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군인권센터는 2019년 5월, 오랜 숙원이었던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2009년 설립 이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은 2013년 육군 15사단 여군 대위 사망 사건 이후 지속 추진되어 왔으나 재정 문제로 인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근 몇 년 간 계속하여 심각해지는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많은 시민들의 후원에 힘입어 설립에 성공하였습니다. 군과 관련한 국내 유일의 성폭력상담소로서 군 관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병사 핸드폰 사용 전면 실시

2018년, 시범운영이 이루어진 병사 핸드폰 사용이 2019년 4월을 기점으로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지난 해 병사 핸드폰 사용의 시범 운영을 위해 각급부대를 순회하며 실태 점검을 하며 기울여 온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였으나 실제 제기되던 불법도박 횡행, 신종 병영 부조리 사례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병사, 병사 가족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간부들도 부대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설문조사 결과 더 높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자율에 기반한 새로운 병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것이며 핸드폰 사용 시간 확대 등을 지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대체역 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국회 마비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 내에 병역법이 개정되지 못하여 징집이 마비될 위기를 겪었으나, 다행히 극적으로 본회의가 개최되어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대체복무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접경지역 장병 복지 확대를 위한 ‘병사 주소 이전’ 법안 발의**

다수의 군인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인프라가 빈약하여 장병들의 휴식과 여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군부대와 공생해 온 지역 상권도 해가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 군과 지역 주민의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병사 주소 이전’ 을 통한 지자체의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하였으나, 첫 삽을 뜬 ‘병사 주소 이전’ 정책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나갈 계획입니다.

- **전두환, 노태우 사저 경호 의경 철수**

군인권센터가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전두환, 노태우의 사저 경호 의경 철수가 마침내 현실화되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두 사람을 경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경찰이 투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군과 관련한 잘못된 역사의 잔재를 찾아내 바로잡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박근혜 탄핵 정국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추가 폭로**

군인권센터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지지부진한 수사로 망쳐버린 ‘박근혜 탄핵 정국 촛불 무력 진압 계획’ 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폭로하고, 재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당시 기무사가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로 촛불 무력 진압을 기획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촛불 정국 이전부터 친위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과 관련한 의혹 규명과 수사 당국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 사무국 운영

(1) 사무국 현황

부서	직책	성명	비고
사무국	사무국장	김 형 남	
기획정책팀	간사	조 규 석	
상담지원팀	팀장	방 혜 린	
	간사	윤 선 주	
	간사	함 성 현	2020년 채용
참여홍보팀	팀장	임 상 열	
	간사	김 지 수	2020년 채용
	간사	이 상 면	캠페인 담당 (비상근)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 숙 경	

▪ 인사 이동

김형남 기획정책팀장이 사무국장으로, 방혜린 상담지원팀 간사가 상담지원팀 팀장으로, 임상열 참여홍보팀 간사가 참여홍보팀 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 채용

상담지원팀 간사로 함성현을, 참여홍보팀 간사로 김지수를 신규 채용 하였습니다.

(2) 사무국 활동

일시	활동
1.15~17	상반기 워크숍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4 상담 및 사건 지원

(1) 상담 분석

① 상담 창구별 분석

- 상담 접수 : 1,669 건 (전년 대비 약 35% 상승)

상담 창구	건수	비율(%)
아미콜 상담전화	706	42.3
홈페이지 상담실	845	50.6
이메일	100	6
방문	4	0.3
카카오톡	8	0.4
서신	4	0.3
기타	2	0.1

- 홈페이지(50.6%), 전화(42.3%)를 통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9년부터 새로 시작한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이용) 상담의 경우, 낮은 접근성, 전화에 비해 떨어지는 소통의 효율성 등으로 기대한 것보다 이용하는 내담자의 수가 적었습니다.
- 장병 스마트폰 영내 사용에 맞춰 홈페이지 상담실 개편을 통해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상담자 - 내담자 간의 실시간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화상담 접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초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접근하더라도 상담 효과를 위해 전화를 통한 2차 상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 · 가해자 유형별 신분 분석

- 피해자 파악 사건 : 1,490건

피해자 유형	건수	비율(%)
현역	1,210	81.2
예비역	57	3.8
보충역	145	9.7
상근예비역	19	1.3
민간인	55	3.7
기타	4	0.3

- 가해자 파악 사건 : 751 건

피해자 유형	건수	비율(%)
현역	647	86.1
예비역	11	1.5
민간인	77	10.3
보충역	1	0.1
기타 (공무원, 일반 직원 등)	15	2

- 피해자의 경우 현역 (81.2%) 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2019년의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도 1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증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자가 민간인의 경우 군인이 가해자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또는 군 내 민간인 인력(계약 직 근무원 등) 에 대한 군의 갑질, 조달 및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 제보 등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피해자 소속 군별 분석

소속	18년	19년	증가율(%)
육군	888	987	-18
해군	42	61	0
공군	119	143	-11
해병대	29	35	-14
의무경찰	48	92	141
의무소방	6	2	-75
사회복무요원	27	161	440
기타 보충역 (전문산업요원 등)	신설	4	-
기타	79	184	172
총계	1,238	1,669	

* 증가율은 총 상담증가분 고려 보정치로 계산함

- 전년도 상담 결과 피해자가 주로 현역 군인에 치우쳤던 것에 비해 금년은 소속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사회복무요원과 의무경찰로, 병무청 - 소속 기관의 사각지대에서 복무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상담이 급증하였습니다.
- 의무경찰의 경우 각종 집회 증가 등으로 여전히 투입 소요는 많으나,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라 근무 피로도, 휴식 시간 미보장, 의무경찰 소속부대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④ 피해자·가해자 계급별 분석

▪ 피해자 계급 분석

전체	대분류	소분류	계급	인원	소분류 내 비율(%)	계 (전체 비율)			
현역	병사		훈련병	38	3.4	1,112 (74.6%)			
			이 병	43	3.9				
			일 병	136	12.2				
			상 병	118	10.5				
			병 장	122	11				
			병(전체)	655	59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2	28.6	7 (0.47%)		
				사관생도(후보생)	5	71.4			
		간부	부사관 및 준사관	하 사	44	26.7	165 (11%)	241 (16.1%)	
				중 사	37	22.4			
				상 사	20	12.1			
				원 사	5	3.1			
				준 위	1	0.6			
				부사관(전체)	58	35.1			
			장교		소 위	1	1.3		76 (5.1%)
					중 위	16	21		
					대 위	31	40.8		
					소 령	5	6.6		
					중 령	-	-		
					대 령	1	1.3		
			장교(전체)	22	29				
		장성		준 장	-	-	-		
				소 장	-	-			
			중 장	-	-				
			대 장	-	-				
	군무원			17	-	17 (1.2%)			
기타	군무원(계약직)			1	-	1 (0.13%)			
	기타			112	-	112 (7.5%)			
계						1,490			

* 의경, 의무소방은 각각 군 계급으로 환원하여 분석하였음.

* 계급을 상세히 밝히지 않은 자와 예비역은 출신 분류(병사, 부사관, 장교 등)에서 전체로 분류하였음.

* 사회복지요원 등 보충역, 민간인 및 계급 미 응답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기타로 분류하였음.

▪ 병사의 경우 일병 ~ 병장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군 내 가혹행위가 수직 위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점차 또래 집단 내의 폭력으로 그 성격과 양태가 확장되면서 생기는 결과라 판단됩니다. 또한 단순 영내 가혹행위· 폭언 이외에도 개개인에 대한 자유권, 사회권 침해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병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상담이 접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부의 경우 하사, 중사, 대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일선 부대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연차가 낮은 간부들의 근무 고충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생활·휴식권 침해, 상관의 폭언, 과도한 근무시간에 관한 호소가 다수였습니다.

▪ 가해자 계급 분석

전체	대분류	소분류	계급	인원	소분류 내 비율(%)	계 (전체 비율)		
현역	병사		훈련병	37	25.1	147 (19.5%)		
			이 병	1	0.7			
			일 병	13	8.9			
			상 병	28	19			
			병 장	21	14.3			
			병(전체)	47	32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	1	
				사관생도	1	-	(0.2%)	
		간부	부사관 및 준사관	하 사	15	13.5	111 (14.8%)	459 (61.1%)
				중 사	26	23.4		
				상 사	35	31.5		
				원 사	19	17.2		
				준 위	2	1.8		
				부사관(전체)	14	12.6		
			장교	소 위	3	1.7	173 (23%)	
				중 위	18	10.4		
				대 위	44	25.4		
				소 령	20	11.6		
				중 령	45	26		
				대 령	20	11.6		
				장교(전체)	23	13.3		
			장성	준 장	1	0.6	175 (23.3%)	
				소 장	8	4.6		
	중 장	162		92.6				
	대 장	4		2.2				
	군무원			4	-	4 (0.5%)		
기타	근무원(계약직)			2	-	2 (0.3%)		
	기타			138	18.4	138 (18.4%)		
계						751		

* 계급 분류 및 통계 방식은 피해자 계급 분석과 동일함.

-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 가해자 비율을 상호 분석하였을 때 병사 - 병사 간 인권침해 보다는 간부 - 병사 간, 또는 고급간부 - 초급간부 간 인권침해의 케이스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장군(중장) 가해자 : 7군단장 관련 상담
-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해자 비율 중 대위(중대장), 중령(대대장), 상사(행정보급관) 계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해당 계급이 일선 부대에서 휘하 장병들을 지휘하고 있을 뿐 아닐 고층 및 인권침해 처리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피해 장병들은 지휘관이 부당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 처리를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한 고충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점점 단순 구타·가혹 행위 사건보다 기본권·사회권 침해 상담이 증가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피·가해자 계급 분포 비율 비교]

구분	18년 1순위		19년 1순위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병	일병(23%)	상병(19%)	일병(12.2%)	훈련병(25.1%)
부사관	하사(24%)	상사(33%)	하사(26.7%)	상사(31.5%)
장교	중위(46%)	중령(25%)	대위(40.8%)	중령(26%)

⑤ 피해유형 별 분석

피해유형		2018년	2019년
가혹행위(고문/약폐습)		65	91
구타(상해/폭행)		94	86
언어폭력(모욕/폭언)		206	242
자의적구금(영창)		48	41
그린캠프(블루캠프)		신설	3
피구금자 부당처우		신설	5
보훈/보상	보훈/보상(유공자/배상/공상)	84	65
	순직/공상	분리신설	15
사망(자살/의문사/사고사)		41	21
의료사고/분쟁		95	29
진료 미보장 등		신설	131
디지털성범죄		신설	9
성폭력(강간/준강간/유사강간/의제강간)		8	3
성추행(강제추행 등)		38	52
성희롱		26	44
성소수자	성소수자	9	2
	성소수자 차별	분리신설	10
균형법92조6		2	2
병역거부/대체복무		신설	5
병영부조리 (불법명령/부당,사적지시/부패비리/왕따)		542	562
복무부적응	부적응	66	58
	부적합	분리신설	61
인사불이익		신설	36
부당징계		신설	63
군수지원/복지		신설	124
사생활침해/통제		145	214
적법절차(피의자 권리)		신설	25
단순문의/의견개진		신설	293
기타		74	155
계		1,541	2,447

* 피해유형은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2019년부터는 보다 자세한 피해 유형 확인을 위해 피해 유형 분류를 새로이 개편하였습니다. 피해유형을 세분화하여 복지분야, 진료권침해, 권리침해 분야 등 10개 항목을 신설하였고, 성폭력, 복무부적합(부적응) 등은 실제 피해 상황에 대해 통계 산출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항목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 3대 폭력인 가혹행위, 언어폭력, 구타의 경우 전체 상담 접수분을 고려하였을 시 예년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전년 대비 30% 이상으로 접수율이 하락하였고, 구타의 경우 접수 건수 절대치를 비교하여도 피해 호소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4년 윤일병 사건 이후 국방부가 다년간 꾸준히 노력해 온 병영문화혁신에 따른 결과로써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됩니다.
- 성폭력 / 성희롱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상담 접수분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접수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부대원 사이의 장난을 빌미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병영부조리 상황에서 수반되는 불쾌한 신체접촉, 주변인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이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음담패설 등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생활상의 성폭력에 대해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국군 장병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함양 및 인권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 세분화를 통해 병영 내 인권침해 유형이 단순히 가혹행위나 폭언, 욕설, 구타 등 1차적인 폭력에 머무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불이익, 군수지원 및 복지, 진료권침해, 사생활 침해와 같이 장병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권리침해 상담이 전체의 20.6%(505건)을 차지하였습니다. 진료권의 경우 「국방 환자관리훈령」 개정에 따른 청원휴가 제도 변화에서 오는 외래 진료 시 청원휴가 사용 제한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고, 사생활 침해의 경우 독신자 숙소 검열문제·초급간부 및 상근예비역 차량통제·출, 퇴근 통제·병사 관물대 및 스마트폰 검열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⑥ 침해 권리별 분석

침해권리		18년	19년
인격권 (행복추구권)	존엄 및 인격권 (행복추구권)	440	678
생명권(안전)		58	98
건강권(보건/진료)		187	209
양심의 자유(종교/사상)		8	12
표현의 자유(언론/출판/학문/예술)		-	-
정보권(접근/비밀/통신)		105	98
신체의 자유(거주/이전/구금)		28	31
사생활의 자유		분리신설	138
참정권(집회/결사/정치적중립)		3	3
평등권		48	119
청구권(수사/재판/보훈 등)		187	255
노동권 (휴식/복지/인사/근로)	노동권(복지/인사/근로)	368	316
	휴식권	분리신설	264
경제권(임금 등)		12	21
재산권(사유재산 등)		신설	10
문화권 (교육/환경/의식주)	문화권(교육, 여가 등)	57	56
	환경권	분리신설	81
	주거권	분리신설	10
단순문의/의견개선		신설	258
기타		118	118
계		1,619	2,775

* 침해권리는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피해유형과 마찬가지로 침해 권리 분류 또한 전년보다 세밀하게 개편하였습니다. 당초 노동권, 문화권, 정보권 등에 포함되어 있던 휴식권, 환경권, 사생활의 자유를 별도 분리하였고, 재산권 및 주거권을 신설하였습니다.
- 전체 접수 건 대비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눈에 띄게 증가한 항목은 평등권 분야로, 주로 병사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규정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군에서는 장교 / 부사관 / 병사라는 엄격한 계급 구조 하에 계층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 에게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접수 건으로는 두발 제한과 관련된 규정,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된 규정 등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인권 및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라 특정 계층에게만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유형별 분석에서도 드러나듯 병력 관리를 명목으로 한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 호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환경권의 경우 문화권 영역 내에서는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하였는데, 환경권과 관련한 상담으로는 노후된 부대·교육훈련 시설 사용으로 인한 고충과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부대 야외활동과 관련한 문의 등이 있었습니다.
- 전체 접수 건에 대한 보정치를 둔다 하더라도 영창과 관련한 신체의 자유 권리 침해 사항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영창 폐지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의 통과 및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정책 방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담지원팀 운영 현황

- 상담지원팀은 2019년 팀장 1명, 간사 1명으로 운영되었으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협조하여 함께 성폭력 상담지원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0년 간사 1명 추가 채용)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주간 상담회의 진행, DB 교차 관리 등을 통해 개별 사건 상담 외에도 별도 모니터링할 과제를 선별하여 상담을 진행, 정책 제안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에 비해서는 해당 부대를 방문하여 직접 피해자와 면담하는 방문 상담은 줄어들었으나, 공문을 보내 조치를 요청하는 케이스는 증가하였고, 피드백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의 개소로 인해 성폭력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디지털성범죄 등 성폭력 현안 이슈와 관련한 상담들이 많았습니다.
- 전년도까지는 게시판 형태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개별 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담자가 다른 내담자의 글 제목이나 조회수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사이버 상담 창구를 이용한 개개인에 대한 내담자 보호 차원에서 개별 상담 답변을 1:1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전체 상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전근대적인 군대 내 폭력이었던 폭행,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상담에서 문화권, 노동권, 휴식권 등 사회권 영역으로 상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은 특히 기존 현역 장병에 가려 사각지대에 위치하였던 사회복지무요원, 2022년 폐지를 앞둔 의무경찰의 상담이 전년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병영 내 폭력 및 가혹행위 상담 경우 계급 간 위계에 따른 단순 폭력보다 또래 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양태로 변모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 2020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상담지원과 함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담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상담 매뉴얼 및 가이드북 제작, 군인권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 개편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주요 지원 사건 (방문 지원, 언론 보도, 법률 지원 등)

케이스	시기	소속	사건 유형	지원 방식
1 △사단 디지털성폭력 사건 (민간인 피해자)	2019년 2월	육군	성폭력	법률지원
2 해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2019년 2월	해군	성소수자 차별	언론보도 법률지원
3 인천공항경찰대 지휘요원 성희롱	2019년 3월	의무경찰	성희롱	방문상담 지휘조언(공문)
4 해병대 연평부대 영내 집단폭행 사건	2019년 4월	해병대	구타, 가혹행위	법률지원
5 ◇탄약창 디지털성폭력 사건	2019년 3월	육군	성폭력	삭제지원(공문)
6 육군 강원도산불 대민지원 열악한 장병 처우 문제제기	2019년 4월	육군	군수지원	언론보도
7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성인지교육 발언 공론화	2019년 5월	경찰	성희롱 성차별	언론보도
8 36사단 상근예비역 대상 과업시간 이후 사생활침해	2019년 5월	육군	사생활침해	지휘조언(공문)
9 ○탄약창 디지털성폭력 사건 (민간인 피해자)	2019년 6월	육군	성폭력	법률지원
10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상담 및 사건지원	2019년 6월 ~	육군	성소수자 차별	언론보도 법률·의료지원
11 8탄약창 스마트폰 사용위반 관련 부당징계(영창)	2019년 7월	육군	자의적구금	법률지원
12 7사단 영내 집단구타 피해자 그린캠프 방치 공론화	2019년 7월	육군	구타, 가혹행위	언론보도
13 7군단 특급전사 강요 및 환자 장병 인권침해 공론화	2019년 7월	육군	병영부조리 진료권침해	언론보도
14 23사단 가혹행위 피해자 병사 사망사고 관련 보도 비판	2019년 7월	육군	구타, 가혹행위	언론보도
15 성소수자 병사 아웃팅, 성희롱	2019년 8월	육군	성희롱 성소수자 차별	언론보도 법률지원(진정)
16 해양의료원 소속 간부 육아시간(탄력근무제) 사용문제	2019년 9월	해군	복지	지휘조언(공문)
17 승선예비역 성추행 사건	2019년 10월	해군 예비역	성폭력	언론보도 법률지원
18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병사 간 영내 폭행 및 모욕	2019년 11월	공군	구타, 언어폭력	법률지원 지휘조언(공문)
19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2019년 11월	국방부	성희롱	언론보도 법률지원(진정)
20 해병2사단 영내 구타, 가혹행위 사건	2019년 12월	해병대	가혹행위, 구타	법률지원

1) 병영부조리 주요사건

▪ 육군 7군단 발생 특급전사 달성 강요 및 장병 건강권 침해 등 인권침해 집중상담 : ~ 2019. 9월

육군 7군단(당시 군단장 중장 윤의철) 예하 부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특정 내용이 동일 부대에서 계속 접수됨에 따라 2019. 7. 4.부터 집중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군단장의 재임기간을 고려하여 2019. 1. 1.부터 2019. 9. 23. 까지 접수된 총 173건의 상담을 분류, 종합 분석하였고, 7 ~ 8월에 걸쳐 총 2번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접수된 내용은 기 알려진 특급전사 강요 및 출타 제한뿐 아니라 환자 장병에 대한 훈련참가 강요, 등급에 따른 차등대우, 위생상태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훈련 강행, 체력단련을 위한 과도한 과업 조정 등 전방위적으로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및 문제지적을 통해 출타 제한 등 일부는 해소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후 조치 결과는 없었고, 윤의철 중장은 2019년 11월 군단장 이임 후 현재 육군 교육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임 중입니다.

2) 폭행, 욕설, 가혹행위 주요사건

▪ 해병대 연평부대 병사간 영내 집단 폭행, 가혹행위 사건 : 2019. 4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복무하게 된 신입 해병인 피해자에게 자대배치 첫날부터 담뱃불을 발로 끄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 해병대 특유의 인계사항 암기 강요, 소등 이후 목·안면 등을 집단으로 구타하는 영내폭행 사건이 부대 간부에게 식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수열외’를 우려한 피해자가 개입을 거부하였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군인권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피해자 조사 과정에 모두 동석하였고, 고소장 제출 등 법률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2017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전군 최초의 인권자문위원회를 결성하였으나 2019년 2월을 끝으로 해산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줄어들었으나, 해당 사건에서도 식별되었듯 해병대 특유의 문화와 선임들의 협박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고 여전히 숨어있는 구시대적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육군 7사단 구타·가혹행위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공론화 : 2019. 7월**

육군 7사단에서 발생한 집단 구타·가혹행위 관련, 영내·외에서 다수의 병사들에 의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뺨과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고, 인분을 먹도록 강요받은 피해자를 사건인지 후 나흘이 지나서야 ‘힐링캠프’에 입소시키고 가해자들은 외박을 보내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24시간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 피해 내용이 식별된 즉시 부대는 피, 가해자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는 피해내용을 식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가해자들 틈에 방치되어 있었고, 가해자들을 전출보내기는커녕 피해자가 힐링캠프로 사실상 ‘방치 격리’ 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중 중한 범죄를 저지른 1명은 구속되었으나,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내 <구타·가혹행위 처리 기준>에는 ‘구타 유발자’를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여전히 군 곳곳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육군 23사단 구타, 가혹행위 피해자 사망사고 관련 사건보도 비판 : 2019. 7월**

‘목선사건’으로 떠들썩하던 2019년 7월, 당시 경계책임부대였던 23사단 소속 병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둘러싸고 각종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 목선 경계 실패 책임을 병사에게 떠넘겨 죽음으로 내몰아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대다수의 언론과 야당은 사망사고를 목선 책임 논란과 엮어 정치 쟁점화시키기 바빴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소초에는 오래 전부터 부대장의 묵인과 방조로 병영무조리가 만성화되어 있던 부대였으며 막 군생활을 시작한 피해 병사에게 ‘상황병’ 임무를 부여한 후 악의적으로 근무를 편성하였고, 작은 실수에도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것은 물론 업무상 실수를 범한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폭행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주변에게 알렸음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기 시작하자 변사사건이 종료되기도 전에 부랴부랴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을 모아놓고 사망원인을 단정지어 버렸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사실도 유가족과 상의 없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확인된 사실을 통해 사건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사건의 본질을 환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권침해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안타까운 죽음을 휘발성 강한 추측성 기사로 소비하는 언론과, 사건 수습을 위해 면피성 발표부터 일삼는 국방부의 행태가 어떻게 사건을 호도하고 망자와 남은 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지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 **공군 6탐색구조지원전대 영내 구타, 가혹행위 사건 : 2019. 11월**

공군 6전대 전투지원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 간 영내에서 발생한 구타, 가혹행위 사건으로 비전투 분야의 근무지 특성상 고립된 공간에서 적은 수의 병사들끼리 근무를 하고, 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간부의 수 자체도 적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입온 직후부터 신고 시기까지 가해자가 끊임없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 발로 차거나, 팔을 꼬집는 등의 폭행을 자행하였으며 생활관에서도 가해자들보다 후임인 병사들을 시켜 피해자를 뒤에서 움아팬채로 가슴을 꼬집거나 구타하였습니다.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낼까 베개를 입에 물리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면 ‘죽이고 싶다.’,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때리고 싶다.’, ‘장기 하나하나 절단하고 싶다.’ 는 등 고립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이 들도록 폭언까지 일삼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피,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부대에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부대 이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전역함에 따라 민간에서 조사 중입니다.

▪ **해병 2사단 영내 구타, 가혹행위 사건 : 2019. 12월**

해병대 2사단 전투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 간 영내에서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으로, 피해 병사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8월부터 신고를 하게 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근무지 및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소한 욕설부터 시작하여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귀를 파주겠다.’ 며 얼굴과 귀를 잡아 당기는 행위, 의자 팔걸이로 피해자의 두부와 신체를 폭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 흉내를 내라’ 며 근무지에서 피해자에게 네발로 기어 다니며 짓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까지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신고하고 싶어도 해병대의 오래된 악습인 ‘선임을 팔아넘기는 해병은 적이다.’ 라는 인계사항으로 신고를 주저하였고, 보다 못한 피해자의 동료병사가 대신 군인권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담을 접수한 즉시 피해자와 상담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가해자가 전역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첩되어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성소수자 주요사건

* 성폭력, 성희롱 사건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성소수자 차별]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 2019. 2월

2017년 육군에서 대대적으로 자행되었던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이후 해군에서 또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에는 수사의 시작이 병영생활상담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병 고충 상담을 위해 병영생활상담관을 찾아간 병사 A는 상담과정에서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상담관은 내담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인지 없이 그대로 소속부대 상관에게 보고되었고, 사건은 법무계통으로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은 A의 진술에 따라 확보된 간부 B에게 이르렀고, 헌병은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은채 간부 B의 숙소와 차량을 압수수색하였고 핸드폰도 포렌식하였습니다. B가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 대화내역을 하나하나 뒤지며 ‘이 사람도 게이냐’ 라고 추궁하였고, 게이 데이팅 앱을 시연해보라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부 C가 확인되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고, 피해자들이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상담 및 법률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태는 2017년 중앙수사단이 보여준 행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례하고 모욕적인 질문은 물론,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핸드폰을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인 수사가 또다시 자행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은 또 한번 군형법 제92조 6 페이지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법률지원비용을 모금받아 신원이 확보된 2명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 [성소수자 차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상담 및 사건지원 : 2019. 6월 ~ 현재

한국군 최초로 현역 신분으로는 성별정정수술(SRS) 까지 마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와는 2019년 6월부터 상담 지원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성별정정 후 계속 군인으로서 복무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상담은 변희수 하사가 부대에 사정을 밝힌 후 사적국외여행 허가를 득해 한국으로 복귀하는 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절차상의 상담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수술 후 복귀한 뒤 일어난 전역심의위원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성별정정) 관련 법률 지원하였고, 현재는 공동 변호인단 및 공대위가 결성되어 전역 결정에 불복하여 육군 본부 인사소청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 병사 지휘관에 의한 아웃팅, 성희롱 사건 : 2019. 8월**

성소수자 병사에 대한 지휘관(중대장)의 아웃팅, 상담을 빌미로 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 등으로 내담자가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내담자가 중대장 및 부대원 일부에게만 밝힌 사실을 중대장이 주변 대원 및 간부들에게 ‘조심해달라.’는 핑계를 대며 다수에게 내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임의로 밝히고, 신병 전입 당시부터 꾸준히 성소수자인 내담자를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무례한 발언 및 교정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내담자의 성지향성에 대한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의 상담 지원을 받아 언론보도 및 해당 부대에 징계 요청이 진행되었고, 해당 중대장은 부대관리훈령 위반 및 모욕 등의 징계 혐의로 중징계(정직) 처분되었습니다.

4) 자의적구금(영창) 주요사건

▪ **육군 제 8탄약창 스마트폰 사용 위반 관련 부당징계 사건 : 2019. 7월**

2019년 4월 장병 스마트폰 영내 사용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사용 관련 상담 문의가 군인권센터로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육군 제 8탄약창에서 근무하던 내담자 (당시 현역병)는 스마트폰 사용 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위반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내담자가 스스로 수칙 위반에 대해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부대에서는 국방부 법무실에서 시달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처리 지시>에 나온 징계양정을 초과한 영창 10일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처분서를 문서로 교부 하지 않는 등 군인징계령 상의 징계절차 위반, 내담자의 항고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군인권센터는 해당 징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하에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및 징계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1. 장병 기본권 증진 사업

군인권센터는 장병 기본권 보장의 제도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되는 반인권적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 및 발행**[1]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발간**

군인권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도종환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군대에 어렵게 썩겨온 인권의 씨앗을 더욱 튼튼하게 가꾸어나가기 위하여 ‘자유권’ 개념에 국한되어있던 군인 인권 보장의 스펙트럼을 ‘사회권’으로 넓혀가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경제, 문화, 건강, 주거,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군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19년 국정감사에 맞추어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8가지 정책을 개발, 제안하였습니다. 8개의 정책은 차후 입법 및 정책 입안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① 열악한 접경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병사 주소 이전’

다수의 군인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문화 인프라가 빈약하여 휴식과 여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공생해 온 지역 상권도 해가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 집니다.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 군과 지역 주민의 갈등이 커져갑니다. 군과 지자체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는 ‘병사 주소 이전’ 정책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병사들이 군부대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게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를 확충하여 상권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병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② 병사 평일 외출, 평일 외박으로 확대

2019년 2월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병사 평일 외출 제도는 병사 휴식권 보장의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대와 시내 간 거리가 먼 접경지역 병사들에게 4시간의 외출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인원 한도에서 출타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주말 외박 인원을 평일로 분산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③ 직업군인 계급 정년 연장

직업군인은 정해진 시기 안에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해야 합니다. 진급에 목을 매는 군의 조직 문화도 이에 기인합니다. 1993년에 만들어진 현행 계급 정년의 연장은 2014년에도 추진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50% 남짓한 제대 군인의 평균 취업률,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해야 하는 중간 간부들을 고려한다면 경험있는 군인들이 진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전역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에 해당합니다. 이에 각 계급별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 보직 별 연령 제한으로 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며, 주기적 복무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미국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④ 병사 월급 책정의 법적 기준 마련

2018년,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되어있던 월급이 이제야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 월급 책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병사 급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정부의 의지에 따라 들쭉날쭉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병사 급여의 법적 근거를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두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급여의 적정선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매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라 동일하게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⑤ 훈련소 생활관 현대화 조기 완료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으로 전 군 생활관이 2003년부터 침대형으로 교체되었으나, 각군 훈련소 생활관은 아직도 대부분 침상형입니다. 2018년 8월부터 훈련소 생활관도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7년이나 되어야 사업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통계 상 훈련병들이 다다다닥 붙어 지내는 낡은 침상형 생활관은 호흡기 질환의 주범으로, 한 여름에도 훈련소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가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에 전군 훈련소의 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조기 완료를 제안하였습니다.

⑥ 훈련 물자 사적 구매 근절

장병들이 훈련에 나갈 때 훈련 물자를 사적으로 구매한다는 상담과 제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입대 한 병사들에게 훈련에 필요한 물건을 부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병사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며, 병영 내 빈부격차 가시화, 훈련 물자 품질 보장 불가 등의 문제를 낳습니다. 전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사적 구매 근절 지침을 마련하며, 동계 훈련 물품 중 노후 물품의 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⑦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군 의료 개혁

2018년, 국방부가 군의료시스템개편추진TF를 운영하며 군 의료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대체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군 병원 이용자의 74%는 의원급 이하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 질환자고, 민간병원 이용률은 해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과 경쟁하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평시 의료 체계는 민간 영역에 위탁하고, 군은 총상, 폭발창, 화생방 등에 대한 전시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 진료권 보장 방안, 신속 후송 대책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⑧ 군인 직장협의회 설치

25만명 직업군인에게 허락되는 근무 상 고충의 내부 해결 수단은 개개인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직업군인도 기본적인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해야 합니다. 작전 상 상명하복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권리 구제, 직업적 처우, 복지를 개선하는 일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등 유럽 각국은 군인에게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를 허용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이미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찰에게 허용되고 있는 직장협의회를 군대에서도 쟁의행위 및 전시 활동 제한을 고려하여 설립 추진해야 합니다.

[2] 군교정시설 실태 조사 실시 및 조사 보고서 발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중 ‘군 교정시설 실태 조사’ 파트를 맡아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군교도소 및 각급 부대 영창의 물적, 인적, 제도적 요소에 대한 각각을 평가했습니다.

군 교정시설은 국방부장관 지휘 하의 군사법체계가 존재하는 현행 법령에 따라 민간과 별도로 마련된 특수 행형기관인 ‘군 행형기관’입니다. 그러나 군은 교정시설 운영을 주무로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무는 후순위로 밀려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관련 연구도 미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 교정시설의 운영, 제도적 요건은 표준화되어있지 않고, 물적 조건은 열악합니다. 인적 자원에 있어서도 교정 인력 확보 및 양성,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간장병을 교도 업무에 투입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조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에서 군 교정시설이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센터는 21대 국회에서 연구 결과에 기반한 입법 제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회운동

[3] 균형법92조의6 폐지 및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무죄 탄원 운동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 중 5명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균형법92조의6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4건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1개 사건의 피해자들은 2년이 지나도록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 피해자들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직접 언론에 등장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실히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군인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군에서 쫓겨나지 않게끔 군인권센터는 이후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19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센터는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균형법92조의6이 폐지되게끔 하고, 대법원에서도 색출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4]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과 대법원의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인하여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부터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회에 임태훈 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9년에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1월 6일,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 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 로 바꾸어 부르기로 함에 따라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 8일에는 국방부 공고 제2018-220호에 따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에 대한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역 도입의 방향으로 첫째, 개인의 양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의 판단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대체복무는 징벌 수단이 아닌 국방의 의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대체역의 설치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현역 복무자의 대체역 편입 허용을 요구하였으며 정부의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 사용 회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후 센터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역의 도입을 위해 활동하였고, 마침내 12월 27일에 대체역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부분이 모두 관철되지는 않았고, 특히 과도한 복무기간, 협소한 복무영역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나 시행령 상 복무기간, 복무영역을 조정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두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시민사회는 현재에도 계속하여 대체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률 제정에 따른 대체역 제도의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1월 7일에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훈 소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 국방 개혁 및 공익 증진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국군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시민의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 군, 또는 군과 관련한 인사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를 감시하고 규탄하였으며 이를 단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부실 수사 규명

2019년 10월 21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관하여 증언하기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임태훈 소장이 2019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였습니다. 센터는 임 소장의 출석에 앞서, 계엄령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하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재차 폭로하였습니다. 문건에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계엄령 모의의 전모를 알았을 가능성도 담겨있었습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계엄 문건은 기무사에 의해 세탁된 문건으로, 센터는 2018년 폭로 이후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문건 원본의 존재를 제보받았고 마침내 이를 문건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건 외에도 박근혜 청와대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을 입증하는 문건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후로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병력 투입 관련 보고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무사가 탄핵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을 염두에 둔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확인한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2018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꾸러진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군 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은폐까지 하였다는 점입니다.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또 다른 주모자인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의 특별수사단을 지휘한 전인수 단장이 휘하 군검사들에게 수사 결과 은폐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김관진 등이 촛불 정국 이전부터 계엄령을 준비하며 친 위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다는 소위 ‘희망계획’을 완전히 은폐해버렸습니다.

이에 센터는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와 조현천의 신병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 하였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리어 센터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황당한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위한 일말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인권센터는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친위 쿠데타를 모의하였던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 대하여 끝까지 시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2]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의 박찬주 前 육군대장 영입 규탄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은 2019년 10월, 황교안 영입인사 1호로 공관병 갑질 사건의 가해자 박찬주 대장을 영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10월 31일, ‘황교안 영입 1호는 갑질전문가’ 를 성명으로 발표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부하에게 갑질을 저질러 기강을 무너뜨린 장군을 국회에 입성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11월 4일, 박찬주 대장은 도리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변명하며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줌게 하고 집의 감을 따게 했지만 이는 갑질이 아니라.’ 며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였고 임태훈 소장을 향하여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 고 발언하는 등 반인권적인 언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갑질로 인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박 대장은 결국 총선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박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에 대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3]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의 5.18 망언 규탄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진태, 김순례, 백승주 이종명 의원 등은 2019년 2월 8일, 국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는 주장이 버젓이 오가고, 5.18민주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는 ‘역사 해석은 집권자의 몫’ 이라며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달라는 축사를 하였고, 국방위원인 이종명은 지만원의 황당한 주장을 일일이 소개하며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된지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다시 뒤집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될 당시 몽니를 부리며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고 논의를 지연시켰던 상황을 일부러 초래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회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 제명을 요구하고, 이종명, 백승주, 정종섭, 이주영 등 사태와 관련된 국방위원을 전원 국방위원회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형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다가 비례위성정당으로 이종명, 김순례 등을 이적시키는 무늬만 ‘제명’으로 사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4] 국방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 조문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며,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의 전시성폭력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여성인권운동가 故 김복동 선생님의 장례에 수많은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발인을 하루 앞둔 2019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 및 군 수뇌부 등은 조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일본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벌인 범죄행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함에 있어 군 지휘부가 마땅히 빈소를 찾아 국군의 존재 의의와 사명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 지휘부는 해마다 친일파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밥을 떠 먹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정작 김복동 선생님의 장례식에는 조문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지휘부의 조문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당일 오후 국방부차관이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조문을 하고 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故 김복동 선생님의 유지에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1) ECOSOC 협의지위 신청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5개의 헌장기구 중 인권사안을 주로 담당하던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2006년 관련 기능을 총회 의결에 따라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체로 이양하였으나 기존 UN 거버넌스에 관한 관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COSOC의 활동에 기여하는 단체로 판단되어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단체는 UN 회의에 참석하고, 공식 구두 발언 및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회의장 근처에서 행사(Side Events) 등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협의지위 획득은 다음을 거쳐 이뤄집니다.

6월 1일	신청서 접수(단체소개, 정관, 재정보고서, 설립인가증 등)
-	NGO 사무국 심사(서류 보완 등)
1월/ 6월	NGO 위원회 'ECOSOC 협의자격 추천' 심의
7월	ECOSOC 정기총회 '협의자격 부여' 채택 - 일반(General), 특별(Special), 등록(Roster) *DPI(공보국 협력지위는 별개임)
이후 매 4년	4주기 보고서(자격 연장)

ECOSOC는 현재 5,400여 단체에 협의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운동연합(1998),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1), 참여연대(2004), 정의기억연대(2014), 대한변호사협회(2015) 등등이 협의지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2)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UN 후속조치 등

지난 2017년 발생한 육군의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제출한 UN 긴급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UN 특별절차 관계자에게¹⁾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해 상황과 2차, 3차 피해에 대한 사실을 공유하였습니다. 후속조치 보고서는 4월, 6월, 8월, 10월에 각각 제출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터리 결정문 영문번역본 등을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초 해군에서 발생한 제2의 색출사건에 대해서도 5월 UN 특별절차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6월 후속조치 보고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7월 15일에서 26일 사이 대한민국을 공식방문한 UN 사생활 권리 특별보고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쿠데타 모의 시도 및 성소수자 장병 색출사건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독립전문가, 의사 및 표현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 실무위원회가 공동으로 발송하였다(UA KOR 2/2017).

(3) UN 인권체계 등 국제협력 사업

(ㄱ) 미합중국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 의견 제출 외

군인권센터는 2012년 이래 미국 국무부에서 주관하여 작성하는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Human Rights Report)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군의 인권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군 인권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였으며 2018년도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대사관에 전달하였고, 2019년도 보고서를 위한 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8월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인천, 대구 퀴어 문화축제 등에 참가한 여러 국가 대사관 직원들과도 한국의 군 인권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10월 2일 국회에서 개최한 대체복무제 토론회에서 핀란드 대사관 및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좌관 등과도 군 인권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인권센터는 계속하여 여러 국가의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국군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ㄴ)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

지난 2015년 있었던 제4차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대한민국 조약 이행 상황 심의에 이어 제5차 심의 과정이 2019년 8월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기로 하여 기존 심의와 비교하여 LoIPR(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전 쟁점목록)을 채택하는 심의 준비 시작 단계에서부터 UN 전문가들에게 안목과 상황을 명쾌히 전달해야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가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과 정보를 취합하여 UN에서 쟁점 목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만 정부에서 하면 되므로 정부의 업무량이 줄어들어 심의 절차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9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합NGO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한편 단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²⁾ 이 보고서에서 군인권센터는 기존에 위원회가 권고한 바(성소수자 차별 시정, 자살 및 구타·가혹행위,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벌, 사망사건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피해구제절차상 피해자 신원 비밀보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진전 및 퇴보에 대한 상황과 더불어 타 조약기구가 권고한 바에 대한 내용(독립적 국방음부즈만 설치, 군법무관의 독립성 확보, 자의적 구금 영장제도 폐지,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생명권(사형제, 안전사고, 의료권 보장), 법치주의(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문제),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박찬주 갑질 사건), 사생활의 자유 등등에 대하여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8월 21일자 보고서를 통해 사전 쟁점목록을 채택하였으며 센터가 제기

2) 원본 다운로드: <https://bit.ly/2uINLB6>

한 다수의 문제제기가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센터	위원회	센터	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설치	각주 인용	피해구제(비밀보장)	채택
피해자 보호	채택	현대적 노예제(예속)	-
인권옹호자 공격	-	영창 및 군기교육	영창만 신규 채택
안보사 기본권 제한	-	강제노동	전환복무 각주 인용
자살 및 예방	'新경향' 외 채택	군사법원 독립성	-
안전사고	-	군검찰 독립성	-
건강권	-	(간부)사생활 자유	-
구타 가혹행위	채택	양심적 병역거부	'예비군' 외 채택
성범죄	(Cf. 구타·가혹, 추행)	증오 선동	-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채택, 각주 인용	군형법상 추행/ 징계 및 성주체성장애 등	추행죄만 채택

이외에도 UN 표현이 자유 특별보고관과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9년 11월 28일 발송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대한 정책의견서, 219년 채택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등에서 군 인권 관련 부분을 발췌 번역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4) 국제회의 참석 및 대사관, 국제기구 관계자 면담 등

시기		회의명	배석자	참석자
월	일			
3	26	DCAF 소개 및 네트워크 간담회	Dr. Schnabel 외 4명 (아태지부장)	임태훈, 조규석
8	22	ILGA Asia Conference 2019	Sr. Madrigal-Borloz 외 1명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임태훈, 김형남, 조규석 외 2인

이외에도 기무사 계엄문건 및 박찬주 갑질 사건에 대해 tbs e-FM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EFE 등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1) 군 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사업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교육 훈령이 제정된 이래 부침을 겪은 군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에 부합하고 인권교육의 원칙에 비취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인권교육센터 ‘들’ 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인권교육의 운영이 각 일선 부대에 넘어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선에서 인권교육을 책임지고, 인권상담관 역할을 겸하고 있는 ‘군인권교관’ 의 양성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역량강화과정’ 과 ‘심화과정’ 을 참관하였습니다.

4/1	군인권교육 공동모니터링 사업 설명 간담회 - 군인권센터, 인권교육협의회 ‘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석
5/2	군인권교육 공동모니터링 준비회의 - 국군 인권교육 교재 분석, 참관 모니터링 기준 수립 등
6/10-14	1차 모니터링: 군 인권교관 역량강화과정
7/5	군인권교육 공동모니터링 평가회의 - 1차 모니터링 점검, 평가기준 정비 등
11/5-8	2차 모니터링: 군 인권교관 심화과정

이외에도 참가단위 단체들과 함께 2016년 국방부가 개정한 ‘국군 인권교육 교재’ 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최종 결과를 2020년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 인권교육협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 외부 강의 등

시기		교육명	대상자	강의자
월	일			
7	13	민주화기념사업회 강의	민주화기념사업 100인회	임태훈 소장
8	30	군대와 페미니즘	불꽃페미 회원	방혜린 팀장
11	8	POSTECH 인권주간 행사 특강	포항공대 재학생	방혜린 팀장

이외에도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요청에 따라 《산업직군을 고려한 사례 중심 폭력예방교육 보조자료》 를 서면 감수한 바 있습니다.

(2) 내부 연수 등

시기		교육명	소속	강의자
월	일			
4	15	국가예산감시 이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6	29	국제인권체제 이해	군인권센터	조규석 간사
9	17	HIV/AIDS 이해	인권재단 '사람' KNP+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정을 사무처장

(1) 후원 현황

■ CMS전체회원 : 1,254명 (2019. 12. 31. 기준)

- 계좌이체 : 1,129명 / 카드결제 : 125명
- 가입연도별 현황(현 지점 유지 회원 기준)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8	27	23	29	12	116	53	54	223	207	463

■ 2019년 후원회원 월별 변화 추이

월	회원		후원금	
	회원 수 (명)	전월 대비 증가 (명)	월 총액 (원)	전월 대비 증가 (원)
1월	812	17	11,398,950	325,000
2월	830	18	11,663,950	265,000
3월	854	24	12,023,950	360,000
4월	878	28	12,453,950	430,000
5월	893	15	12,983,950	530,000
6월	921	28	13,481,950	498,000
7월	930	9	13,616,950	135,000
8월	948	18	13,903,950	287,000
9월	956	8	14,008,950	105,000
10월	1,093	137	16,251,250	2,242,300
11월	1,241	148	20,810,550	2,317,000
12월	1,254	13	21,015,550	205,000
계	1,254	463	21,015,550	7,699,300

(2) 육군훈련소, 서울지방병무청 캠페인

- 더 많은 입대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소개하기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앞에서 매 주 월요일 입영식을 전후로 입대장병과 입대장병 가족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8월부터는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예비입영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에 새롭게 시작한 서울지방병무청 캠페인은 군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는 물론, 예비입영자의 병무행정 및 징병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입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대도 알고 가면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전하기 위해 군대 내 인권 상황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0년에는 예비입영자를 한층 더 다각도로 만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2018년 ~ 2019년 캠페인 가입 현황

2019년	캠페인 가입자 (명)	2018년	캠페인 가입자 (명)
1월	7	-	
2월	6		
3월	7		
4월	7		
5월	4		
6월	2		
7월	1		
8월	5		
9월	2	9월	4
10월	7	10월	20
11월	14	11월	16
12월	2	12월	10
합계	64	합계	50

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1) 취지

군에서 다수의 성폭력이 발생하지만 낮은 젠더 감수성과 피해자중심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군 형법과 군사법원 등 체제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취약한 현실입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통해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보다 조직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 정책제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권센터의 외연 확장과 군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2) 경과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전수안 김지형 고문, 공동집행위원에는 김인숙 이경환 강석민 안미자 운영위원이 참여했으며 일반 시민들이 설립추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총 197명의 설립추진단과 35,746,969원의 벽돌기금 후원으로 2019년 5월 14일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에 설치 신고를 완료(신고번호: 제 서울마포-여성-20190514-001호)함으로써 오랜 숙원 사업이던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2. 상담소 운영 현황

■ 총 117건 (성추행 49건, 성희롱 44건, 성소수자 상담 12건 등)

성폭력 상담의 경우 언어폭력 및 괴롭힘의 수단으로써 발생하는 불쾌한 신체접촉(추행) 건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혐오표현과 음담패설,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왜곡·편파 발언 등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채팅방 등 SNS를 통해 공유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피해 범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군의 경우 성폭력 관련 사고를 신고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피해와 관련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성폭력의 경우 올해 직접 지원한 3건은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성폭력과 관

련해서는 리벤지포르노의 양상과 성매매와 연계된 사건도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이 가지는 폭 발생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향후 대응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 트랜스젠더 상담의 경우 군 면제와 관련한 예비 입영자 상담이 다수를 이뤘으나, 올해 처음으로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별정정 관련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지원 및 생활비 지원 등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 많은 수가 피해자 스스로 가지는 수치심, 본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사건이 알려질 경우 생기는 부담감 등으로 인해 후속 상담이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 주요 지원 사건

[1] 디지털성폭력 사건

(1) 육군 1사단 디지털 성폭력 사건: 2019. 2.

2019. 2. 13.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의 연계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가해 병사와 피해자는 결별한 애인 관계였는데 피해자(민간인) 몰래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SNS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건입니다.

면접상담을 실시한 후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3. 12.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반포를 막고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영상물 삭제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입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가해 병사의 전역이 임박하여 민간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6월 민간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7월 불법촬영과 관련한 벌금형이 있었습니다.

(2) 육군 △탄약창 디지털 성폭력 사건: 2019. 3.

2019. 3. 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계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A 병사가 전입(2019.1) 온 후부터 “4월 1일 휴대폰 사용이 전면화되면 불법촬영한 전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돌리겠다” 며 공공연히 말했는데 문제의식을 느낀 한 병사가 상담소에 제보한 사건입니다.

상담소는 그 긴급성을 인지하고 3. 29. 국방부 여성가족정책과와 육군본부 헌병실에 공문을 발송하여 휴대폰 압수 및 반포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육군본부 헌병실에서는 공문 수신 즉시 A 병사로부터 문제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증거물과 자백을 확보해서 입건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병사와 상담소, 국방부가 공조하여 불법영상물이 반포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방지한 사례입니다.

(3) 육군 ○탄약창 디지털 성폭력 사건: 2019. 6.

2019. 6. 5.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피해 상담글을 확인하고 면접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가해자는 전 애인으로 피해자(민간인) 몰래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SNS로 유포하여, 그 영상물을 본 사람들이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인지하게 된 사건입니다.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영상물을 삭제지원 요청하고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률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육군중앙수사단에 협조 요청하여 성범죄 수사팀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전역으로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으며 현재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2] 성희롱 사건

(1) 인천공항경찰대 지휘요원 성희롱 사건: 2019. 3.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지휘요원(계급 경위)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음담패설을 자행하여 군인권센터로 상담이 접수된 건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의무경찰대원과 방문 및 면접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단순히 의경대원들에게 자행한 욕설과 음담패설뿐 아니라 대원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00이 표정이 안좋네, 여자친구가 그 날(월경주기 의미)인데 안 나옴(임신가능성 내포)?”,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 여자친구랑 몇 번 빼고(성관계 의미) 왔어?” 는 등의 성희롱을 포함, 경찰대 소속 여자 직원을 향한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매매 후 대원들에게 과시하는 듯한 자랑까지 했던 것으로 진술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방문 면접상담 이후 면담결과에 대해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경찰청에 제출되었으며, 해당 지휘요원은 보직해임 후 징계 조치 되었습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지휘관 성희롱 사건: 2019. 4.

상담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예하 제2기동단 의무경찰 대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성차별, 성희롱 교육을 한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 당시 A부단장(경정)은 4. 11. 수십 명의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남자의 성욕은 평생 해소될 수 없다, 남자는 씨를 뿌리고 여자는 정자를 받아 임신하고 육아를 책임지는 존재다, 여자는 뛰어난 유전자를 선택한다. 남자는 여자가 성적 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며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생각을 성교육 시간을 빌어 이야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A부단장의 교육은 성차별적이며 나아가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이 명백한 사안으로 상담소는 5. 23. 기자회견을 통해 A부단장에 대한 엄중 징계와 경찰청에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해당 경찰청은 의무경찰들을 상대로 휴대폰 분출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으며 5. 30에는 조사단이 의무경찰들에게 성희롱인지 성차별인지를 묻는 질문지를 배포하고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 18. 상담소는 경찰 수뇌부의 성인지감수성의 부재를 지적하고,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경찰 조직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매커니즘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사건: 2019. 10.

작년 전국 교육대학에서 연달아 불거졌던 ‘남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건들과 같은 맥락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사이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발생한 동기 여생도 외모 폼핑, 성희롱, 모욕, 나아가 상관인 훈육장교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과 성희롱까지 폭로된 사건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인지한 여생도들 중 일부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핵심 가담자 중 1명은 동기생을 구타하는 일까지 있었으나 내부 징계절차를 거쳐 근신에 그쳤습니다. 또한 학교측이 징계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성희롱과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특히 간호장교로서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명예를 지키고 위선을 보이지 않아야 함.’ 과 같은 피상적인 말로 성희롱 문제를 은폐시켰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생도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론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나라한 캡처 내용까지 함께 공개가 되었지만, 학교 측은 ‘절차대로 징계하였고, 가해 행위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교 결정을 하지 않았다.’ 고 대응하며, 되려 공론화에 동참한 생도들에게 동기생 간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벌였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공론화 이후 생도들에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휘 조언을 근거로 하여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을 처벌하지 않았다.” 며 더이상 문제 삼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며, 동시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및 감찰실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후대책 등은 양성평등위원회 1기 임기 마감 등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 역시 조사 진행 중입니다.

3] 성추행 사건

(1) 육군 하사 째질방 성추행 사건: 2019. 5.

2017. 5. 7 피해자가 생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상경하여 째질방에서 자던 중 육군 하사가 추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추행을 인지한 즉시 일어나서 가해자를 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2018. 5. 18.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항소로 진행된 고등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장면을 지연합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고등군사법원의 시연 요구로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 상황은 JTBC로 보도되었습니다. 2019. 5. 1. 고등군사법원은 장기선발을 앞두고 있고 애인이 있으며 무릎이 아픈 가해자가 추행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담소는 피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사건을 인지, 상담하게 되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현행범인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현행범을 경찰에 인계했기 때문에 무죄로 가해자가 방면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군인만 봐도 두려움에 시달리는 증상이 생겨 고통받고 있습니다.

(2)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2019. 10.

피해자는 해양대학교 졸업 후 A글로벌 자회사 G서비스에서 승선근무예비역 3등기관사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는 2018. 5. 8. 상선 카디날호(자동차 선적 상선)에 승선했는데 근무 초기부터 기관장이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깨우는 등의 추행과 성희롱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도에 하선했고 이후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 제기 후 상담소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인천해양경찰청 조사 과정에 피해자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했습니다. 10. 21.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고 상담소에서는 해양경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과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해양대는 모집 과정부터 군특례(승선근무예비역)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피해자 또한 군특례가 해양대 진학에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실승선일로부터 5년 이내 실승선일 3년을 근무해야 군특례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인 강제하선권과 진급 및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의 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던 사례로써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제도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운영

1) 개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2019. 6. 11.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에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장’ 설치신고하여 26일 지정 완료(신고번호: 제 서울 마포-여성-20190611-001호)됨으로써 군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전문상담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후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시설로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제1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상담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019. 9. 19. ~ 11. 15. 약 석 달 동안 총 100시간 27강 12명의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본 과정에는 총 30명 선착순 모집에 36명이 신청하여, 총 1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수강생 전원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여 제1기 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원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장’ 설립 후 처음 진행된 교육으로 신청했던 모든 인원이 수강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운영해봄에 따라 교육과정 조정 및 강사진 평가 등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강사진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1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커리큘럼]

일시	과목명	강사명	이수 시간	비고
9. 19	등록 및 강의 소개			
	여성학-현대 한국사회 속 여성주의의 이해	정희진	4	
9. 20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인권옹호자로서의 상담원의 자세와 윤리	임태훈	4	
	성폭력의 이해-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의 이해	김숙경	4	
9. 26	대상별 상담과정-장애인 성폭력	배복주	4	
	대상별 상담과정-군인 및 동성 간	임태훈	4	
9. 27	여성인권과 폭력-한국사회 성폭력 실태	이미경	4	
	성폭력의 이해-폐쇄사회 내 성폭력의 특징과 개념의 이해	이경환	4	
10. 10	대상별 상담과정-아동 성폭력	김소향	4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군형법 포함)	이경환	4	
10. 11	성폭력의 이해-성산업구조와 성매매의 이해	정미래	4	
	상담사례 및 실무실습-현장 답사(서울함을 중심으로)	군성폭력상담소	4	참여수업
10. 17	대상별 상담과정-군 성폭력(군인사 체계를 중심으로)	강석민	4	
	상담사례 및 실무실습-현장 답사(군사법원을 중심으로)	군성폭력상담소	4	참여수업
10. 18	법률구조 실무- 민간 및 군의 수사 절차의 이해	강석민	4	
10. 24	상담 기법-상담 기법의 실제1(전화상담을 중심으로)	이미혜	4	
	상담사례 및 실무실습-현장답사(일반법원을 중심으로)	군성폭력상담소	4	참여수업
10. 25	성폭력 관련 정책-성폭력 사건 상담의 실제(통합적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조중신	3	
10. 31	성폭력의 이해-데이트 및 사이버성폭력	김인숙	4	
11. 01	상담 기법-상담 기법의 실제2(면접상담을 중심으로)	이미혜	4	
	상담심리 개론- 상담심리의 이해	김미랑	3	
11. 07	의료지원 실무-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체계의 실제(군병원 포함)	김대희	3	
	상담사례 연구1	조중신	3	
11. 08	상담원리와 기법-성폭력 상담 원리와 기법의 이해	김미랑	4	
	역할연습-역할연습의 실제	김미랑	3	
11. 14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성폭력 대응 법적 절차와 구제방식의 이해(군사법원 포함)	이경환	4	
	상담사례 연구2	조중신	3	
11.15	행정실무-상담일지의 작성 등 실무 연습	김숙경	2	
	수료식 및 기념촬영			

2019년 결산

1 수입

과목			일반 후원금 회계	군성폭력 상담소 회계	OSF재단 사업 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
관	항	목						
후원금 수입			387,329,507	33,110,000	118,042,287	0	538,481,794	95.1
	후원금수입		387,329,507	33,110,000	118,042,287	0	538,481,794	95.1
		일반후원금	387,329,507				387,329,507	68.4
		지정후원금		33,110,000	118,042,287		151,152,287	26.7
후원금 외 수입			27,748,367	4,990	0	0	27,753,357	4.9
	교육수강료 수입		4,281,900	0	0	0	4,281,900	0.8
		수강료	4,281,900				4,281,900	0.8
	용역 수입		15,000,000				15,000,000	2.6
		연구용역	15,000,000				15,000,000	2.6
	예금이자 수입		42,627	4,990	0	0	47,617	0
		예금이자	42,627	4,990			47,617	0
	기타후원금 외 수입		8,423,840	0	0	0	8,423,840	1.5
		일자리안정자금	4,500,000				4,500,000	0.8
		잡수입	3,923,840				3,923,840	0.7
자산 수입			0	0	0	0	0	0
	기타자산 수입		0	0	0	0	0	0
		임차보증금 회수					0	0
전입금			0	29,871,740	0	-29,871,740	0	0
	전입금		0	29,871,740	0	-29,871,740	0	0
		회계 간 전입금		29,871,740		-29,871,740	0	0
고정부채 입금			0	0	0	0	0	0
	기타고정부채		0	0	0	0	0	0
		기타고정부채					0	0
당기수입 총계			415,077,874	62,986,730	118,042,287	-29,871,740	566,235,151	1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3,262,979	0	29,497,277	0	42,760,256	
지급수입 총계			428,340,853	62,986,730	147,539,564	-29,871,740	608,995,407	

2

지출

과목			일반 후원금 회계	군성폭력 상담소 회계	OSF재단 사업 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
관	항	목						
인건비			156,402,615	29,871,740	0	0	186,274,355	39.8
	인건비		156,402,615	29,871,740	0	0	186,274,355	39.8
		급여	109,733,900	29,871,740			139,605,640	29.9
		상여금	5,000,000				5,000,000	1.1
		퇴직금	20,423,065				20,423,065	4.4
		법정부담금	21,245,650				21,245,650	4.5
운영관리비			67,778,370	20,927,680	0	0	88,706,050	19.0
	시설관리비		13,057,850	18,146,900	0	0	31,204,750	6.7
		건축물관리비	1,507,850	800,000			2,307,850	0.5
		시설용역비					0	0
		임차료	11,550,000	17,270,000			28,820,000	6.2
		기타시설관리비		76,900			76,900	0
	일반관리비		26,064,733	266,500	0	0	26,331,233	5.6
		지급수수료	12,903,739	200,500			13,104,239	2.8
		제세공과금	6,874,790				6,874,790	1.5
		통신비	2,122,250				2,122,250	0.5
		소모품비	4,163,954	66,000			4,229,954	0.9
		기타일반관리비					0	0
	운영비		28,655,787	2,514,280	0	0	31,170,067	6.7
		일반용역비					0	0
		복리후생비	2,671,337				2,671,337	0.6
		교육훈련비	1,372,670				1,372,670	0.3
		회의비	2,327,930				2,327,930	0.5
		행사비	22,283,850	2,514,280			24,798,130	5.3
		기타운영비					0	0
사업비			48,012,318	300,000	107,387,810	0	155,700,128	33.3
	일반사업		48,012,318	300,000	0	0	48,312,318	10.3
		인권침해피해지원	12,784,586				12,784,586	2.7
		제도개선/공약증진	1,527,564				1,527,564	0.3
		인권 교육	9,853,110				9,853,110	2.1
		시민 참여	7,298,826				7,298,826	1.6
		연구	3,991,709				3,991,709	0.9
		후원회원 관리	6,094,298				6,094,298	1.3
		홍보	4,503,085	100,000			4,603,085	1.0
		연대	1,959,140	200,000			2,159,140	0.5

OSF재단사업	0	0	107,387,810	0	107,387,810	23.0
인건비			60,297,500		60,297,500	12.9
사무실 임차료			9,900,000		9,900,000	2.1
북한군인관살태조사			20,250,310		20,250,310	4.3
군인권홍보캠페인			0		0	0
상담역량 강화			4,840,000		4,840,000	1.0
홈페이지 리뉴얼			12,100,000		12,100,000	2.6
사업 외 비용	233,000	0	0	0	233,000	0
기타사업외비용	233,000	0	0	0	233,000	0
잡지출	233,000				233,000	0
전출금	29,871,740	0	0	-29,871,740	0	0
전출금	29,871,740	0	0	-29,871,740	0	0
회계 간 전출금	29,871,740			-29,871,740	0	0
예비비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예비비					0	0
자산지출	0	0	0	0	0	0
기타자산지출	0	0	0	0	0	0
임차보증금 지출					0	0
고정자산매입지출	5,200,000	9,749,080	0	0	14,949,080	3.2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5,200,000	9,749,080	0	0	14,949,080	3.2
집기,비품 매입비	5,200,000	9,749,080			14,949,080	3.2
도서 구입비					0	0
고정부채상환	21,633,300	0	0	0	21,633,300	4.6
장기차입금상환	21,633,300	0	0	0	21,633,300	4.6
장기차입금 상환	21,633,300				21,633,300	4.6
기타고정부채상환	0	0	0	0	0	0
기타고정부채 상환					0	0
당기수입 총계	329,131,343	60,848,500	107,387,810	-29,871,740	467,495,913	1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9,718,780	1,608,260	40,172,454		141,499,494	
자금지출 총계	428,850,123	62,456,760	147,560,264	-29,871,740	608,995,407	

2019년 감사 보고

감사의견서

본 감사는 군인권센터 정관에 의거하여 군인권센터의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2019년 사업연도 결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현재 군인권센터 사무국 운영 및 목적 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이 단체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의 일반회계가 정관에 의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 4. 17.

군인권센터 감사 정정훈





Homepage : www.mhrk.org | E-mail : mhrk119@gmail.com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 Tel: 02)7337-119 | Fax : 02)2677-8119